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인턴 시작

전북도, 상반기 82명·멘토 참석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진로탐색·경험·생활비” 매우 만족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공공기관 직무 인턴 82명, 멘토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도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또한 높은 경쟁률과 참가한 청년들

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턴에 참여한 학생은 사회생활과 진로탐색, 전공업무의 경험, 생활비 보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총 529명의 지원자 중, 최종 82명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4주간 각 기관의 부서에 배치해 예비사회인으로서의 현장업무 역할을 쌓고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이다.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멘토와 멘티의 만남, 인턴 근무 매뉴얼 교육, ‘짧음, 어울려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청년특강 등을 진행했다.

멘토와 멘티(인턴)들의 첫 만남의 서머한 분위기를 깨고 친교를 강화하기 위해 Ice-breaking 시간을 운영,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및 인턴 역할과 근무조건에 대한 설명 및 인턴 역할과 근무조건에 대한 설명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공기관 직무인턴은 현장실습비 지원과 1:1 점담 멘토링 등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장체험을 인턴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점검으로 근무상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상담 등 멘토링을 통해 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계획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공과 연관된 공공기관의 직무체험을 통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값진 시간이 되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직무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업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나 향후 취업에 실질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강,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중앙 - 지방, 경제정책 첫 논의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추진방향 공유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전략을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

화 등 중앙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순환적 변화를 강조했다.

지자체에서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행안부-지자체 합동 감찰 실시 협조 등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력키로 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자동차융합기술원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자동차융합기술원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성수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JIAT 비전 2025 및 JIAT의 약속' 선언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38억원 투입

전북도가 녹색비람을 일으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지난 19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이에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을 지난해(79억원)보다 74% 가량 증가한 138억원을 확보, 태양광과 태양열을 공공시설물 29곳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 주택(800가구)과 아파트 세대(1722가구) 등에도 태양광을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군산에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된다. 이 사업은 4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산 제2국가산단에 18.7MW 규모의 태양광을 짓는 것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R&D, 인력양성, 기업 유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부정축산물 유통 꼼짝마”

내달 14일까지 설명절 대비 특별단속 돌입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계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18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91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이 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 등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

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둔갑하는 행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품을 냉장 포장용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도 동물위

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이력번호 등이 의심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686)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외정부, 외교공백·남북관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외교 공백과 남북관계 단절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정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정부업무 보고에서 “현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대외적 현실은 외교의 공백과 남북관계의 단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자 외교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은 재확인, 재정립됐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지만 사드 문제로 뒤물렸던 중국과의 관계는 수습돼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는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유관 부처인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각 부처 국무위원들로부터 새 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